

R&D현장에서선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2012년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목 차

제1장 R&D도우미센터 소개	3
〈참고〉 홈페이지 이용방법	4
제2장 상담사례	11
1. 연구개발비	11
1-1. 인건비(참여율), 학생인건비	11
1-2. 연구장비·재료비	21
1-3.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23
1-4.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29
1-5. 간접비	35
2. 주요제도	46
2-1. 연구노트	46
2-2.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48
2-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舊, 학생인건비 폴링제)	52
2-4. 기술료(소유권)	55
2-5. 참여제한	58
3. 기타 상담사례	61
제3장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7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71
〈참고〉 각 중앙행정기관 주요 세부규정 목록	72
2. 과학기술기본법(발췌)	73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76
3-1.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134
3-2. 연구노트지침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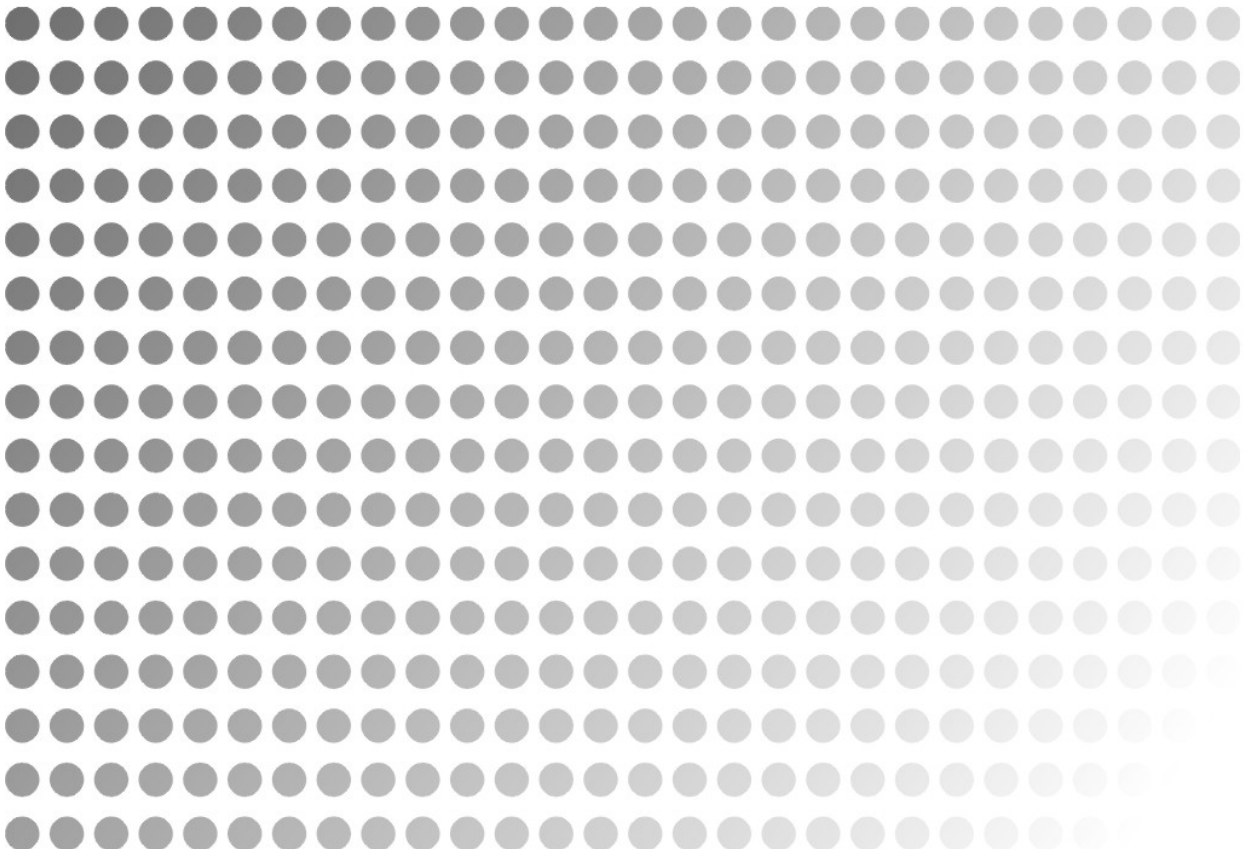
3-3.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143
3-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150
3-5.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155
3-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157
3-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58
3-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159
4. 참고자료	166
4-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종합안내	166
4-2. 3책5공(과제 수 제한기준) 운영방안	171
4-3. 주요 전문기관 현황	174

R&D현장에선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2012년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집

제1장

R&D도우미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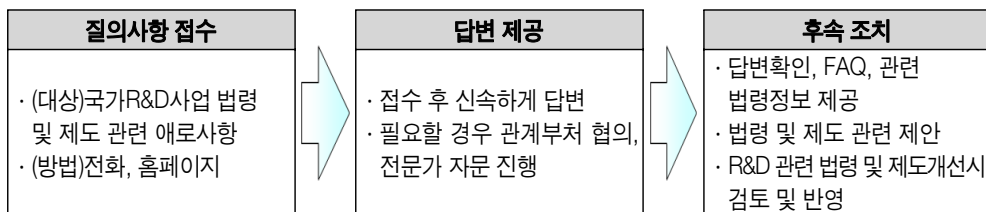


R&D도우미센터 소개

제1장

- R&D도우미센터는 국가R&D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령과 제도에 관련된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의 상시적인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2009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R&D도우미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상담 및 의견수렴을 전화상담(02-724-8700)과 온라인상담(www.rndcall.go.kr)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 절차〉



- 연구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R&D도우미센터로 접수된 법령해석 및 연구개발비·제도 관련 주요 상담사례를 모아, 2012년 1월부터 동 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2011년에 이어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동 상담사례집의 답변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례집에 담긴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처음 방문하시는 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Click
- 재방문하시는 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Click



- 각 항목 입력(체크표시는 필수입력항목) 후 저장 Click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문의하기 및 답변확인

- 로그인 후 '문의하기' Click



- 문의내용 등 입력 후 ‘문의하기’ Click

(SMS, E-mail 수신에 체크하시면 답변 등록 후 알림서비스 가능)

국립과학기술지원원
R&D도우미센터

상담센터 | 자료실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R&D도우미센터 상담센터입니다.

온라인상담 +

자주 묻는 질문
Q&A
제안하기

온라인상담 R&D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담당자가 답변해 드립니다.

※ SMS 또는 E-mail 수신 시, 답변이 등록되면 입력하신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알림메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MS ☒ 수신 ☐ 미수신 선택 -

E-MAIL ☒ 수신 ☐ 미수신 @ 직접입력 ☒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제목

질문내용

첨부파일 ☒ 파일추가 ☐ 파일제거

[> 문의하기](#) [> 취소하기](#)

- 문의의 진행상태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국립과학기술지원원
R&D도우미센터

상담센터 | 자료실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R&D도우미센터 마이페이지입니다.

문의하기
전체 : 1건
처리중 : 1건
완료 : 0건

제안하기
전체 : 0건
처리중 : 0건
완료 : 0건

스크랩현황
건수 : 0건

번호	구분	분류	제목	등록일	처리일	진행상태
1	문의	테스트		2013.01.11		처리중

- 답변 완료 후에는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립과학기술위원회
R&D도우미센터

· 홈 · 사이트맵 · 개인정보수정 · 로그아웃 · 일반사용자님 접속하셨습니다. 통합검색 | 검색

상담센터 | 자료실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R&D도우미 홈페이지가 연구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연구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온라인상담
문의사항에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

최근게시물

구분	제목	등록일
08.4	테스트	2013.01.11
08.4	연구결과 재로비 사용	2013.01.07
08.4	27대 중점녹색기술과...	2013.01.04
08.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2013.01.02

공지사항 more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 2013.01.09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 2012.12.20
-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 ... 2012.12.20

전화상담
02-724-8700
평일 : 09:00 ~ 11:30, 13:30 ~ 18:00
· 국가R&D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세요.

국립과학기술위원회
R&D도우미센터

· 홈 · 사이트맵 · 개인정보수정 · 로그아웃 · 일반사용자님 접속하셨습니다. 통합검색 | 검색

상담센터 | 자료실 | 마이페이지 | 공지사항

R&D도우미센터 마이페이지입니다.

문의하기

전체	처리중	완료
12	02	12

제안하기

전체	처리중	완료
02	02	02

스크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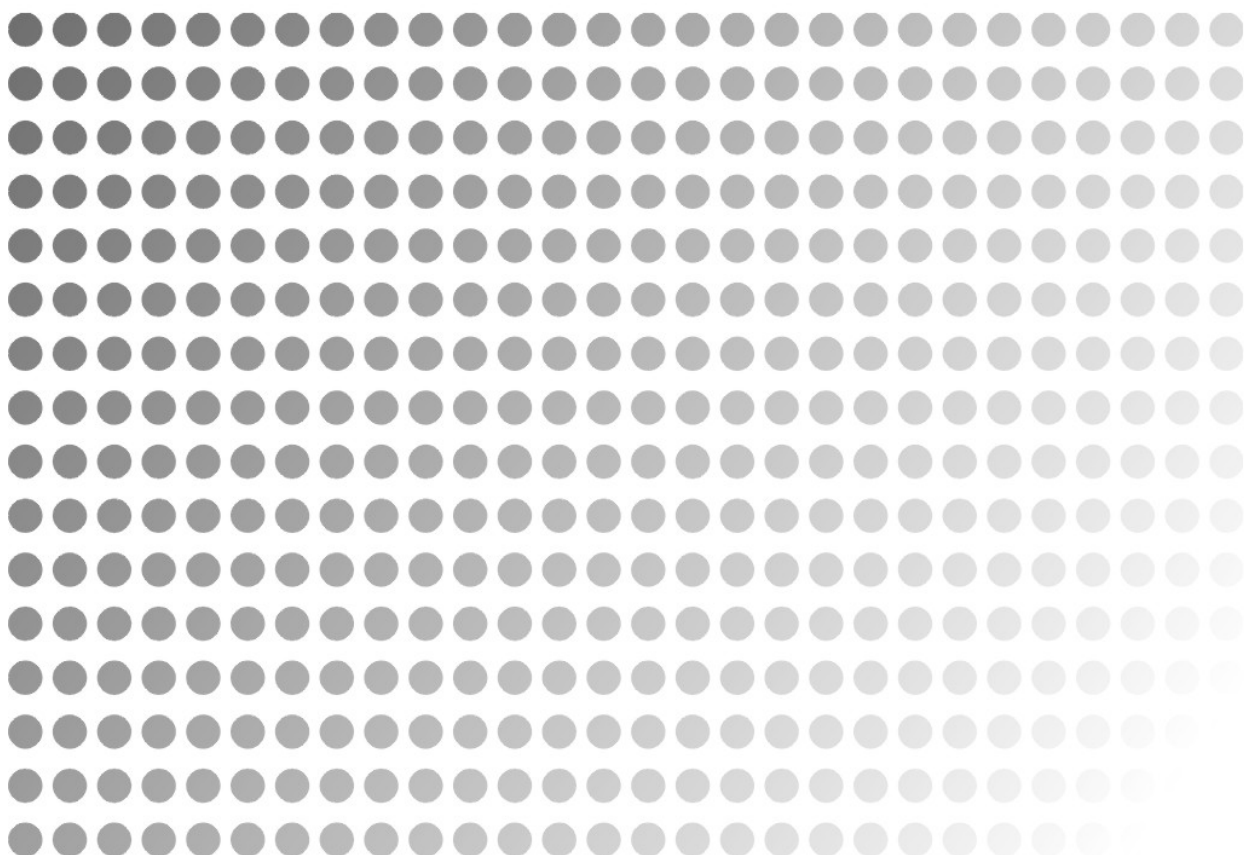
번호	구분	분류	제목	등록일	처리일	진행상태
1	문의	선택	테스트	2013.01.11	2013.01.11	완료

R&D현장에선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2012년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집

제2장

상담사례



상담사례

제2장

1. 연구개발비

1-1 인건비(참여율), 학생인건비

Q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자료 및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연구개발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려고 한다면 '인건비'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한 '인건비 산출 비용, 채용 시 증빙자료 및 절차'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자가 연구개발과제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라면 아래 규정의 '간접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 가.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Q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지급 시, 해당 참여연구원의 4대 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계상해야 하나요?

A 개정 전 규정에서는 참여연구원의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부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2.07.01. 개정된 규정에서는 '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의 인건비 계상 및 집행에 보다 융통성이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기관의 급여기준이 '4대 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상하실 수 있으며, '4대 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Q '기관의 총 소요 인건비의 100%'라 함은, 기관의 지원인력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만을 의미하나요?

A 아래 규정에서의 '기관 총 소요 인건비 100%'는 해당 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총 소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130%까지 실지급 되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관 총 소요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A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는 불가피한 경우 1인당 최대 130%까지 참여율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기준 인건비 100%(기관 총 소요 인건비 100%)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에 해당 기관들에서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율 관리의 어려움(예: 연구기간 중복 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비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은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어느 세목에 계상해야 하는지요?

A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세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세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통합관리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직접비>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Q 학생연구원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 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타 대학교 학생도 학생인건비 세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A 아래 규정에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학생 인건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별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바와 같이 A대학(연구기관)에서 B대학(타 대학) 소속 학생 연구원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때, B대학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A대학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총량으로 계상된다면 '인원 총량 계상 (man-month)'의 특성 상 B대학의 어떤 학생연구원이 A대학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는 A대학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출장여비 등의 사용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원 총량 계상(man-month)'해야 하는 학생인건비 보다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직접비>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Q 연구개발계획서 상 인건비 편성내역에 해당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참여율을 0%으로 계상하여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아래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이며, '해당 과제 참여율'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자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기 확보된 기관 소속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해당 과제 참여율'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며, '해당 과제 참여율'로 본인이 과제에의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와 같이 '참여율 0%'라는 것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니 이러한 계상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Q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율 13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던데, 여기에는 대학도 포함되나요?

A 아래 규정에서의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이라 함은, 해당 기관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의 재원이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동 규정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충당하는 기관으로써 기관 재원의 운영방식이 문의주신 대학과는 차이가 있는 바, 해당 규정의 문구에는 '대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Q 인건비 실지급이 가능한 사유 중, '지식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A 해당 부분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별표1]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Q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실지급 할 수 있다던데, 실지급이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규정의 내용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실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시까지 계속 인건비를 실지급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Q 대학의 조교로 고용되어 4대 보험 및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대학에 의해 정식으로 고용되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조교의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으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Q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불가피하게 기관 총 소요인건비 100%를 초과하는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승인을 얻어서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 고려했던 불가피한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부에 의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정부의 승인에 의한 과제 이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수입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기관의 특성, 사례 등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나 해당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연구장비 · 재료비

Q 개정 전, 개정 후 규정 중 [별표2]에서 연구장비 구입 시 개정 전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라는 문구였고, 개정 후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라는 문구인데 이 두 문구 다 '단계 종료'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지요?

A 아래 규정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연구기기 및 장비의 구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개발비로 구입된 연구기기·장비가 해당 과제에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규정입니다.

이에 개정 후 규정에서는 '최종(단계) 종료'임을 명시하였으며, 개정 전 규정에서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의 문구에는 '단계 종료'가 포함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장비 · 재료비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 ·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 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 조성비 등 포함)

Q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에는 '재료'도 포함되나요?

A 아래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되어야 하나, '재료'는 연구기간 종료 시 까지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하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사오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 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1-3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Q 평일 오전에 회의 후 점심식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평일 점심에 식대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부당집행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의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회의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부분이고, 식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야근 및 특근 시 소요되는 식사비용(평일 점심 식대는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간주함)입니다.
따라서 평일 점심에 회의를 진행한 경우,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신 후 회의비를 집행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3)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Q 국내 출장여비의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근거리 출장(시내 출장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거리 출장(시내 출장 등) 증빙서류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출장품의서' 등을 증빙서류로 감안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 지역 간 이동(근무지외 출장 등) 등 원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빙(영수증)을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Q 여러 명이 출장을 같이 간 경우, 1인당 1건씩 영수증을 따로 구비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에는 숙박, 교통, 식대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출장을 간 참여연구원 개인별로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예를 들어 3인이 출장을 간 경우, 영수증 수에 관계없이 3인에 대한 출장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Q 주관연구기관이 '사립대'이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국립대' 소속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국립대 소속 연구자의 출장 시에는 어떤 여비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지만, '연구자 B'가 '국립대 소속'으로 '공무원'에 준하게 되는 바, 아래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자 B'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계상·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Q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직접의 10% 이내로 계상하면 모두 면제인가요?

A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면제에 해당하려면, 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과제 추진비의 정산을 면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사업(과제)이어야 하고 ② 해당 사업(과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관련 증명자료는 갖추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Q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활동비 항목이고,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연구과제 추진비 항목으로 되어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는데 특별히 국외 출장여비를 연구활동비로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A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류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건당 집행금액이 소액이나 집행 건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정산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국외 출장여비'의 경우는 건당 집행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 대상인 연구활동비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활동비 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Q 연구개발비 집행 시, 평일 점심 식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야근식대나 공·휴일의 식대는 인정이 되나요?

A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식대'는 '평일 점심'에 집행한 경우 부당집행 금액인 바, 원칙적으로 '야근 및 특근'에 대한 식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근 및 공휴일의 식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1-4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Q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만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인건비가 감액되었으나, 연구수당이 감액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연구수당 감액을 해야 하나요?

A 아래 규정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게 되면, 부당집행으로 회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의 인건비 대비 계상비율과는 관계없이, 원래계획에 비해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인건비 규모 변경으로 인한 연구수당의 과다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오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Q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이라면, 해당자가 연구수당을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구수당 배분을 위해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아래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상되며, 동 규정 [별표2의2]에서는 계상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이라면 해당 연구책임자 1명에 해당하는 연구수당만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계상된 연구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연구개발과제에 불필요한 인력을 임의로 참여시켜 연구수당을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Q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아래 규정 [별표2]에 따라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장려금' 형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구수행 도중에 참여연구원의 변경으로 연구수행을 중간에 그만둔 연구원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여도가 인정되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준한다면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직접비>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받은 금액

Q 연구기간 중간에 참여연구원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나요?

A 아래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는 바, 참여연구원이 승진하여 인건비가 증액되었더라도 연구수당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연구수당은 직급·직위 등에 무관하게 연구결과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이므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책정된 연구수당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Q 위탁연구개발비를 전액 감액(위탁연구과제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아래 규정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승인받아야 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탁연구개발비 감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위탁연구개발비 전액 취소(위탁연구과제 취소)'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구성이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아래 규정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약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 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Q 일반 용역과 위탁연구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위탁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제3의 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위탁연구 개발비 집행 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관리 관련 훈령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용역'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받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연구기관의 회계관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5

간접비

Q 간접비를 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비는 아래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계상 및 집행은 동 규정 [별표2]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준수해야 하는 간접비는 기관으로 수입되는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수입된 간접비만을 그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 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Q 간접비에서 대학의 교내 학술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즉, 간접비로 대학 자체 과제를 구성하고 교내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아래 규정에 따라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당 간접비 중 '민간수탁 등의 연구비에서 조성한 간접비'를 재원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연구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조성된 간접비'를 재원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간접비 과다계상 논란, 사용용도 저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분야에 대한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Q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모두를 성과평가하고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기여한 모든 인력이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지원인력 구분이 모호하여 성과급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기관의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기관에서 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비고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Q 연구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간접비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A 간접비율이 따로 고시되었던 두 법인이 통합되어 하나의 법인이 된 경우에는 두 법인의 간접비율 중 유리한 간접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Q 계약직 참여연구원의 복리후생비성 경비(단체보험, 경조사비, 체육행사비 등)는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계상 시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복리후생비성 경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항목인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관련된 경비는 '직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직접비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 하여 '간접비'에서 모두 인정할 수는 없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Q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아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일시적 연구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경비를 간접비의 연구개발준비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 및 연구개발준비금의 취지에 따라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에는 문의주신 '출산 및 육아에 의한 공백 기간'도 포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 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Q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완료된 후에 단순 누락으로 계상되지 않은 간접비에 대해서 추가로 간접비를 책정(신설)할 수 있는지요?

A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간접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추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간접비를 신설하였다면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금액은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국외 소재 대학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국외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비율은 어떻게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명칭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간접비율 정률 적용 예외사업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참여 국가 및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 정률계상사업: 간접비 고시율 “정률” 로 적용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고시율 이내 또는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연구개발사업	○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Q 연구지원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에서 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성 비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기관공통지원경비'는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 '관리성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건비성 비용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Q 대학의 '우수논문 게재 인센티브, 과제 유치(수주)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A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은 연구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연구과제를 수주하였다는 사유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집행으로 인정되어 정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수연구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비고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Q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10% 상한기준은 연구기관의 간접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산 시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용도

2.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간접비 계상기준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Q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예산에 반영은 해야 하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사용용도

3.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Q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은 그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업비 환수조치에는 정산 시 부당집행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A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제1항 및 아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만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산 시 부당집행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주요제도

2-1

연구노트

Q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노트를 필수적으로 써야 하나요?
연구노트를 써야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아래 지침 제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 모든 내용은 연구노트로 관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지침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외 대상 과제를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노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Q 연구노트지침 제5조제5항의 통제의 범위에는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차원의 '제재조치 또는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A 아래 지침의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자들의 '개인별 업무량 체크, 연구노트를 통한 연구역량 평가, 기관 내 근태관리 및 부재의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통제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노트지침」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2-2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Q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과제 수 제한(3책5공)에 대해서도 제외되는 것이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제도(3책5공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3책5공 제도'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판단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아래 규정 제3조에서 동 규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3책5공 제도' 적용 범위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Q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이 개선 되면서 '세부과제 책임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 개정 이전에 협약된 세부과제 책임자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요?

A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제도)' 고시에 따라 3책5공 중 '3책'의 산정은 '세부과제 책임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며, 해당 '3책5공 제도'는 동 고시 부칙에 따라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3책5공을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Q 1. 5천만원 이하의 단독과제가 3책5공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모든 부처의 과제에 적용되나요?

2. 3책5공에서 제외된다는 1억원 이하의 공동기술개발과제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A 1. 문의주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은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1억 원 이하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는 아래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①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고 ②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제의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3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비영리법인의 과제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과제 수 산정에는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Q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연구과제에서, 1억원 이하의 과제를 판단할 때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 1억원 이하'의 과제라 함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과제를 말합니다.

이 때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가 세부과제라면, 세부과제의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舊, 학생인건비 풀링제)

Q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입니다. 일부 교수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링제 방식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A 기존('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시행 이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계정(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생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가 아닌 일반 외부인건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학생의 인건비는 연구과제 종료 시 다른 연구개발비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정산(이월 불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3.01.01.부터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통합관리 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의 구체적인 예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집행비율 조사기간 마지막날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예: 점검 대상기간(2012.1.1.~2012.12.31.)경우 2012.12.31. 이후 종료되는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지정취소)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이천만원
 -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Q [별표2] 하단의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이라는 말은, 과제별로도 학생인건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A 해당 문구는 [별표2]의 평가내용 중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상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이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폴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유지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항 포함) 관리 가능
학생 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일 조회 가능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 (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능(팝업 경고 등)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조회 가능 여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와 타 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가능
	폴링제 과제 정보 등록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가능 여부(폴링제 과제명, 과제별 참여 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배정 여부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2-4

기술료(소유권)

Q 부담금을 부담한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고 할 때, 무상 실시를 할 수 있나요?

A 아래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료 감면 등(100%감면)'을 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실시는 원칙적으로 '유상'인 것으로 판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Q 제23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 비율은 각 부처 규정을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사용비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 제1호의 금액을 사용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서 동 조항 제2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 제34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세부 기준을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 규정에서 그 집행범위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준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이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34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 할 수 있다.

Q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대기업이고 실시기업은 중소기업일 경우, 전문기관으로 납부해야 할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몇 %인가요?

A 아래의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으로 납부해야 할 기술료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전문기관으로 납부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문의의 경우 대기업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를 전문기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5.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6.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5

참여제한

Q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은 해당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도외 사용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비 부당집행'은 '해당 과제의 연구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동 규정 중 [별표2]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부당집행 기준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며,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연구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써 그 잘못의 경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동 규정에서 '사업비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사업비 환수조치 및 참여제한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Q A부처와 B부처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연구책임자가 A부처 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B부처 과제도 중단되어야 하나요?

A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는 동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A부처 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 중이던 B부처 과제에 대해서도 협약의 해약이라는 제재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기타 상담사례

Q [별표2]와 [별표2의2]의 개정사항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선정, 협약,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결과물의 평가·활용 등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내용들의 적용시점을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예: 협약일 등)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아래 부칙과 같이 '2012.07.01부터 시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하게 되었고 보다 정확한 적용일 명시가 필요한 사항은 부칙 전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2]는 아래 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제12조제5항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며, [별표2]에서 정하는 세목(연구과제추진비) 등의 내용이 [별표2의2]에 포함되므로 [별표2의2] 또한 2012.07.01.이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Q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아래 규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동 조항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조제4항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동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잔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자를 사용한 후의 잔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제19조제4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잔액'에 포함되어 회수대상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Q 중소기업의 자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거나 위탁 받아 수행할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기업부담금과 인건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부담금의 경우, 아래 규정 [별표1의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기업일 때보다, 중앙행정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비교적 줄어듭니다. 또한 참여기업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현물 부분 산정 시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는 다르게 현물의 각 항목(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시설비, 재료비, 부품비)비율 제한이 없는 바, 현물 구성에 융통성을 가집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 [별표2]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나,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및 ‘중소기업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실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 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 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Q 연구개발비의 이월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요?

A 아래의 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 이월'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비'의 경우 제12조의2제3항제2호와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비'의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간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이월'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Q 대기업인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에서 '나목'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A 아래의 규정 따라 대기업인 참여기업은 현물 중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현물 중 50% 이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①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②재료비, ③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나머지 부분 중 50% 이내로 ①번 항목을 부담하고, 그 외 부분은 ②번, ③번 항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 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Q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아래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 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동 규정 제12조의3에서 말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12조의2제3항제5호의 적용일은 제12조의3의 적용시점과 동일하게 2013.01.01.이후가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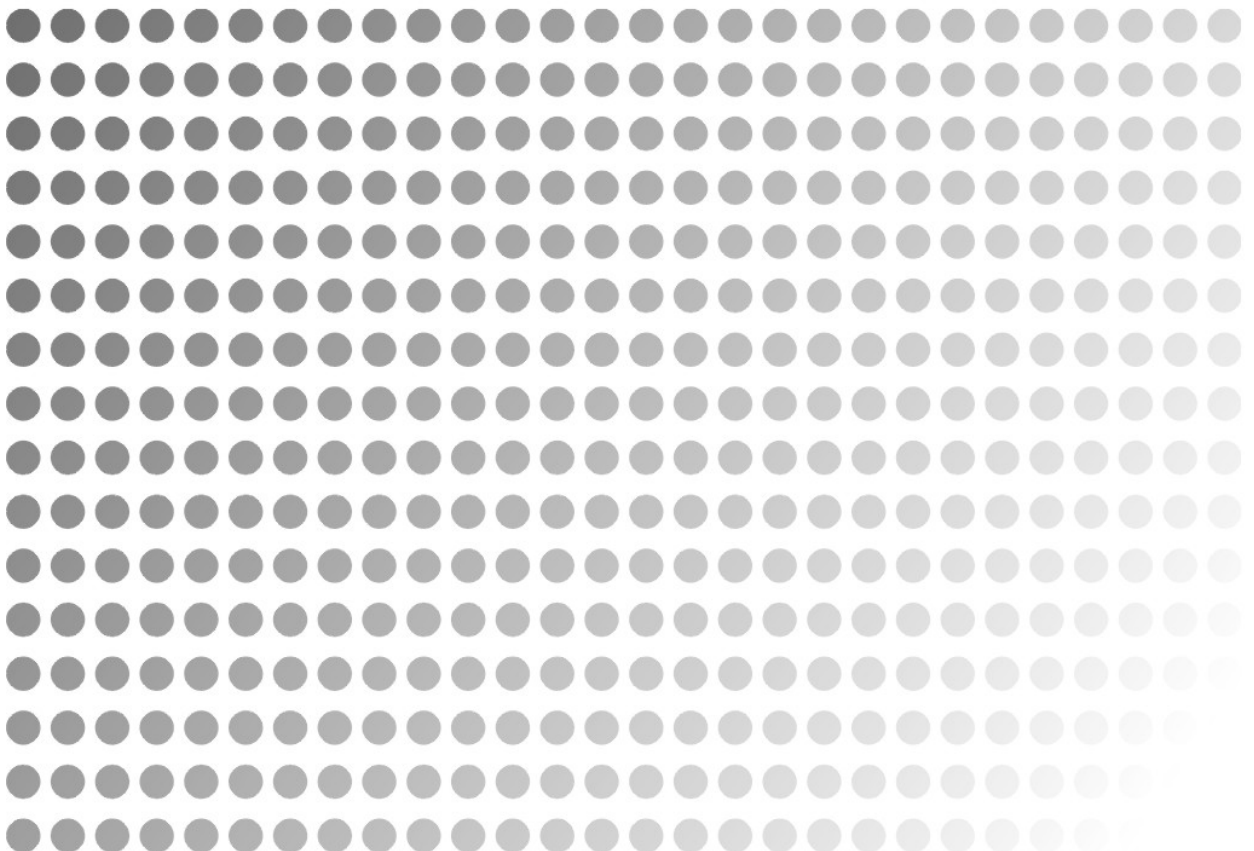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D현장에선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2012년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집

제3장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3장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법 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행정규칙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연구노트지침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침

【참 고】 각 중앙행정기관 주요 세부규정 목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에 의거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 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 처리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2. 과학기술기본법(발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2.1.22] [법률 제10878호, 2011.7.21, 일부개정]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관리, 성과관리, 연구윤리의 확보 등 연구수행의 기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

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과 연구수행 중에 생산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

- 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삭제 <2012.5.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삭제 <2012.5.14>

⑦ 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이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5.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⑥ 삭제 <2012.5.14>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⑧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16> 삭제 <2012.5.14>

<17> 삭제 <2012.5.14>

<18>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 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 ⑨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2.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3.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삭제 <2012.5.14>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3.28>
-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현황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

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 ⑨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 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 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채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2.5.14>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 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I 급비밀, 군사 II 급비밀, 군사 III 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3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

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 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

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희·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16>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19>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 <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 <2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 <24>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 <25>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 <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명이 되며, 간사위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28>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6개월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4]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삭제 <2012.5.14>
2. 삭제 <2012.5.14>

부칙 <제23788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고시하되, 2012년도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및 고시를 요청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고시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참여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

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건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로 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별표 1] <개정2012.5.14>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12.5.1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4] <개정 2012.5.1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 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 개발 비 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 연구 개발 비 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 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2] <개정 2012.5.1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 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퍼센트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경우 정부 수탁사업과 제3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제 참여율을 계상 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p> <p>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p>
	연구 장비 · 재료비	<p>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 조성비 등 포함)</p> <p>2. 시약(試藥) · 재료 구입비 및 전산</p>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 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 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p>	<p>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 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p>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받은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 하지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 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p>	<p>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p>및 전자 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 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 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전문가 양성 등 과학 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 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 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금액과 사용계획, 사용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2.5.14>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직접비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3] <신설 2011.3.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 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 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 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침단장비의 설치·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4] <개정 2012.5.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2.5.14>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3-1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7.26]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 제2호, 2011.7.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기관 등의 책무

제4조(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의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8조(연구윤리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①영 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에는(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원칙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②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접수 및 조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위한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의 방법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결과통보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 제3항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조사대상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이 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연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와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연구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영 제30조의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표절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4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제1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결과와 통보) ①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와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등)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결과와 보고) ①연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③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후속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31조 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연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보고받은 해당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조사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 등)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연구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청)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의 규정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칙 <제2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3-2

연구노트지침

[시행 2011.10.4] [국가과학기술위원회훈령 제2011-19호, 2011.10.4,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체분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별도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9호, 2011.1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3-3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시행 2013.1.29]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3-2호, 2013.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 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율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호, 2013.1.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2012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4
	(수리과학연구소)	16.14
	핵융합연구소	17.45
	한국천문연구원	44.11
	한국한의학연구원	25.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23
	한국해양연구원	18.09
	(극지연구소)	26.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83
	한국원자력연구원	28.77
산업기술연구회 (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4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7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2.04
	한국식품연구원	13.84
	(세계김치연구소)	26.09
	한국기계연구원	11.29
	(재료연구소)	13.12
	한국전기연구원	18.99
	한국화학연구원	19.64
	(안전성평가연구소)	13.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7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7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4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25
	광주과학기술원	22.9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43
	한국연구재단	18.7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2
	한국세라믹기술원	22.28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7개)	(사)고등기술연구원	18.37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19
	자동차부품연구원	26.99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6.67
	전자부품연구원	24.55
	한국신발피혁연구소	24.26
	나노융합팩센터	24.39

4. 대학

(단위 : %)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1	가천대학교	29	98	성공회대학교	15
2	가톨릭대학교	30	99	성균관대학교	31
3	강남대학교	20	100	성신여자대학교	20
4	강릉원주대학교	28	101	세명대학교	20
5	강원대학교	27	102	세종대학교	21.76
6	건국대학교	27.2	103	세한대학교 (전 대불대학교)	5
7	건양대학교	15	104	수성대학교 (전 대구산업정보대학교)	10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 경기공업대)	10	105	수원대학교	5
9	경기대학교	26	106	수원여자대학교	1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107	숙명여자대학교	31
11	경남대학교	31	108	순천대학교	20
12	경북대학교	30	109	순천향대학교	20
13	경상대학교	29	110	송실대학교	30
14	경성대학교	27.47	111	신라대학교	15
15	경인교육대학교	15	11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5
16	경인여자대학교	5	113	아주대학교	29
17	경일대학교	31	114	안동대학교	30
18	경주대학교	5	115	안양대학교	10
19	경희대학교	30	116	연성대학교 (전 안양과학대학)	5
20	경희사이버대학교	10	117	연세대학교	32
21	계명대학교	29	118	영남대학교	30
22	계명문화대학	5	119	영남이공대학교	15
23	계원예술대학교	5	120	영동대학교	10
24	고려대학교	29.85	121	영산대학교	20
25	고려사이버대학교	10	122	용인대학교	20
26	공주교육대학교	10	123	우석대학교	15
27	공주대학교	29	124	우송대학교	5
28	관동대학교	20	12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29	광운대학교	25	126	울산대학교	26.79
30	광주교육대학교	15	127	원광대학교	29
31	광주대학교	15	128	위덕대학교	10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32	광주여자대학교	15	129	유한대학교	5
33	국민대학교	29	130	을지대학교	15
3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131	이화여자대학교	29
35	군산대학교	31	132	인제대학교	30
36	극동대학교	15	133	인천대학교	30
37	금강대학교	15	134	인하공업전문대학	10
38	금오공과대학교	20	135	인하대학교	28
39	김천대학교	5	136	장로회신학대학교	10
40	나사렛대학교	15	137	전남과학대학교	10
41	남부대학교	10	138	전남대학교	34
42	남서울대학교	15	139	전남도립대학교	5
43	단국대학교	30	140	전북대학교	32
44	대구가톨릭대학교	29	141	전주교육대학교	10
45	대구과학대학교	5	142	전주대학교	31
46	대구교육대학교	15	143	제주대학교	29
47	대구대학교	31	144	제주한라대학교	10
48	대구보건대학교	15	145	조선대학교	30
49	대구한의대학교	30	146	조선이공대학교	10
50	대림대학교	5	147	중앙대학교	29
51	대원대학교	5	148	중원대학교	5
52	대전대학교	29.9	149	진주교육대학교	10
53	대진대학교	20	150	차의과학대학교	20
54	덕성여자대학교	20	151	창원대학교	29.6
55	동국대학교	31	152	천안연암대학	5
56	동덕여자대학교	10	15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10
57	동명대학교	20	154	청운대학교	15
58	동서대학교	20	155	청주교육대학교	15
59	동신대학교	20	156	청주대학교	15
60	동아대학교	30	157	춘천교육대학교	15
61	동양대학교	15	158	충남대학교	33
62	동양미래대학교	5	159	충북대학교	32
63	동원대학교	5	160	충청대학교	5
64	동의과학대학교	10	161	침례신학대학교	5
65	동의대학교	31	162	평택대학교	5
66	명지대학교	23.83	163	포항공과대학교	31
67	명지전문대학	10	164	한경대학교	15
68	목원대학교	20	165	한국교원대학교	20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69	목포대학교	27.5	166	한국교통대학교	29
70	목포해양대학교	15	167	한국국제대학교	10
71	배재대학교	28	1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72	백석대학교	20	169	한국복지대학교 (전 한국재활복지대학교)	5
73	백석문화대학	15	17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5
74	부경대학교	28.65	171	한국성서대학교	5
75	부산교육대학교	10	172	한국외국어대학교	30
76	부산대학교	30	173	한국체육대학교	15
77	부산외국어대학교	31	174	한국항공대학교	29
78	부산장신대학교	5	175	한국해양대학교	30
79	부천대학교	5	176	한남대학교	22.03
80	북한대학원대학교	5	177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81	삼육대학교	20	178	한동대학교	10
82	상명대학교	29	179	한라대학교	10
83	상지대학교	20	18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5
84	서강대학교	29	181	한림대학교	28
85	서경대학교	15	182	한림성심대학교	5
86	서남대학교	10	183	한밭대학교	30
8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	184	한서대학교	15
88	서울교육대학교	20	185	한성대학교	10
89	서울대학교	28.51	186	한세대학교	5
90	서울디지털대학교	5	187	한양대학교	29
91	서울시립대학교	20	188	한양사이버대학교	10
92	서울여자대학교	20	189	한양여자대학교	10
93	서원대학교	5	190	한일장신대학교	15
94	서일대학	10	191	해천대학교	5
95	서정대학교	15	192	호남대학교	15
96	선문대학교	20	193	호서대학교	20
97	성결대학교	15	194	홍익대학교	2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기준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

3-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지정

[시행 2012.6.29]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2-1호, 2012.6.29, 제정]

1.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지정

☐ 논문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 · 외 논문정보의
관리 · 유통체계 구축 · 운영

지정일자 : 2012.6.29.

☐ 특허

지정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www.rndip.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 · 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의 관리 · 유통체계 구축 · 운영

지정일자 : 2012.6.29.

☐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port.kisti.re.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 · 유통체계
구축 · 운영

지정일자 : 2012.6.29.

☐ 연구시설 · 장비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ntis.go.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 · 장비의 관리 · 통체계
구축 · 운영

지정일자 : 2012.6.29.

□ 기술요약정보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

지정일자 : 2012.6.29.

□ 화합물

지정기관 : 한국화학연구원(www.chemback.org/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지정일자 : 2012.6.29.

□ 생명자원

지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정보: www.biodata.kr/
www.kobis.re.kr/ 실물 : kctc.kribb.re.kr/ kbrc.kribb.re.kr/)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붙임 1> 참조)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 기탁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지정일자 : 2012.6.29.

□ 소프트웨어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지정일자 : 2012.6.29.

2. 지정요건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함

1.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의 취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성과물 관리·유통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1. 지정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5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요구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취소, 정지,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관리과 02-724-8743

[붙임 1]

생명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대표자)
교과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인프라사업본부	1) 국립중앙과학관(안승락) 2) 연구소재중앙센터(이연희)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인프라사업본부(김창진)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정보센터(이상혁)
국토부			'13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시까지 한 시적으로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한 곳(서울 대, 김원교수)이 업무 담당	1) 이화여대(해양산호자원, 송준임) 2) 서울대(해양절지동물자원, 김원) 3) 한남대(해양해면, 극피, 태형동물, 박진숙) 4) 군산대(해양독성 생물자원, 이원호) 5) 부경대(해양유용플랑크톤자원, 허성범) 6) 한국해양연구원(해양미생물자원, 권개경) 7) 충북대(해양연체동물, 박중기) 8) 충남대(해양식물, 부성민)
농 림 부	농업 (농업 유전 자원법)	농진청	1) 국립농업과학원	1)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NAC) 2)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3)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2) 국립축산과학원	1)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산림청	1) 국립산림과학원 2) 국립수목원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 국립산림과학원 2) 국립수목원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	-		1)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생명공학과 2)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병리연구과 3)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1)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2)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4) 가톨릭 중앙의료원 검체은행 5) 강원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6) 경북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7) 경상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8) 계명대동산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9) 부산대병원 인체자원은행 10)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1) 순천향대부천병원 인체자원협력은행 12) 서울아산병원 조직세포자원센터 인체자원협력은행 13) 원광대의과대학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14) 을지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5) 인제대부산백병원 약물유전체연구센터 16) 전북대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17) 충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18) 충북대병원 인체자원은행 19) 화순전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붙임 2]

실적보고 양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10페이지 내외

1. 추진현황 (3페이지 내외)

- 1)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2) 주요 업무 현황: 업무 추진 방향 및 목표, 운영목적, 업무범위 등
- 3) 전담기관 운영 현황: ①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② 관리·유통에 관련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③ 관리·유통에 관련한 보안체계 현황
- 4) 최근 2년간 운영 예산

2. 추진실적 및 목표 (5페이지 내외)

- 1) 최근 2년 이내 성과물 등록·기탁 현황(건수) 총 누석 건수
- 2) 최근 2년 이내 성과물 활용 현황(건수) 및 총 누적 건수
- 3) 시스템, 제도 개선 등 기타 추진 실적
- 4) 장중단기 목표(정략적, 정성적)

3. 향후계획 (2페이지 내외)

- 1) 성과물 등록·기탁률 제고 및 활용(유통) 촉진을 위한 계획
- 2) 추진 일정
- 3) 기타 의견: 운영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 해당 제시된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필요한 경우 부록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3-5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12.7.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 제3호, 2012.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3항, 제24조제6항 및 제24조의9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최종보고서·요약서의 서식)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또는 논문 등 연구결과발표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서의 서식)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르

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8조(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서식)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9조(보안관리 현황 서식)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호, 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5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의2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자료

3-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시행 2012.7.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2-2호, 2012.7.2,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7.2>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7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시행 2012.7.2]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2-3호, 2012.7.2,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부칙 <제2012-3호, 2012.7.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8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시행 2013.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3-1호, 2013.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 인증을 받거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은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정연구기관은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등)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

표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 및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평가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기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신규 신청기관이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관내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 등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래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③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할 때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

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의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호, 2013.1.9>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구분 (√표시)	① 연구비 관리 인증기관		
		②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기관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온라인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우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 1부.

201X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제6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부	기타의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기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유지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항 포함)관리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일 조회 가능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관리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능 (팝업경고 등)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조회 가능 여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와 타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가능			
	풀링제 과제 정보 등록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 가능여부 (풀링제 과제명, 과제별 참여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배정 여부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3]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총괄표>

(최근 1년, 단위:천원)

학생인건비 총액(A)	환수된 학생인건비(B)	환수된 학생인건비 비율(C=A/B)

<세부사항>

연구책임자	제재 사유	제재시기(년)	환수금액(천원)	환수조치 기관

[별표4]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 잔액현황 보고기간 :

(단위 : 백만원)

학생인건비 총액(A)	학생인건비 집행액(B)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학생인건비 잔액(D=A-B-C)	학생인건비 집행비율(E=B/A-C)

▪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제명	담당부처	연구비	학생인건비

4. 참고자료

4-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종합안내

□ 개요

-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간접비 사용용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하 성과급)’ 적용기준을 공지하였으나 여전히 문의가 많아 원칙을 재공지
- 경과
 - ‘12. 6. 27. 성과급 지급기준 각 부처 및 연구기관에 통보
 - ‘12. 7. 13. 산단관리자협의회에 성과급관련 질문 취합 요청
 - ‘12. 7. 25. 산단관리자협의회에서 질문 송부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개정규정 적용기준

○ 정의

성과급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사업’이라 함)의 간접비에서 개인에게 지출되는 장려금 등 인센티브성 금액을 말함

<상세설명>

- 성과급이란 1. 국가사업의 간접비를 재원으로 2. 성과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 따라서 국가사업의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지 않는 장려금 등은 성과급이 아니므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 국가사업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우수논문격려금 등의 인센티브성 금액은 어떠한 형식으로 지급하든 성과급에 해당되어 상한 10% 제한을 적용

○ 지급대상

국가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

<상세설명>

- 연구자는 국가사업을 수행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사업을 통한 성과가 전혀 없는 연구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음
- 타기관에 소속 연구자가 해당 국가과제에 참여한 경우 해당 과제 수행 연구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기관의 연구자에게도 지급 가능
- 지원인력은 연구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보며 그 범위는 기관의 자율로 정함
- 지급대상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며, 지급대상 중 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은 기관의 자율로 함

○ 평가방법

지급기준, 방법, 시기 등은 기관 자율로 하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상세설명>

-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도 기관의 자율이며, 여러 기준을 활용할 경우 가중치 배분도 자율
- 간접비 흡수로 기관재정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간접비의 일정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불인정
 - ※ 여러 평가항목 중 재정확충기여를 포함할 수는 있으나 타 평가항목에 비하여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성과범위는 국가사업의 성과가 포함된다면 충분하고 그 외의 성과를 포함할지 여부는 기관 자율임
- 연구자와 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달리할지 여부도 자율
-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

○ 개정규정 적용시점

- 2012.7.1이후 협약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부터 간접비의 성과급 지급 상한 10% 적용

<상세설명>

- 협약서에 있는 협약일이 기준이며 협약일이 2012.7.1. 이후인 과제부터 개정 규정 적용
- 협약서의 연구시작일이 협약일과 다른 경우 협약서의 연구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상한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상세설명>

- 성과급 지급 상한기준은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사업의 간접비에 적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위탁된 과제도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업, 외국정부 또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업 관련규정을 적용

○ 성과급 총액 기준

간접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된 경비의 하나로써, 공동관리규정 [별표2] 간접비 항목의 성과급 계상기준 중 해당연도는 회계연도를 뜻하고, 총 간접비란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처리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 수입 처리된 간접비 금액을 말함

<상세설명>

- 연구기관마다 회계연도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연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 다년도 과제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회계기간을 걸치는 연구과제도 간접비 수입 처리는 일괄 수입 처리, 월할 균등 배부 등 연구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 성과급 규모의 기준이 되는 해당연도 총 간접비는 국가사업에서 해당연도에 흡수된 비용만 인정하고 전년도의 이월금(집행잔액)은 제외함
- ‘해당연도 간접비’란 성과급 평가시기 또는 성과 발생시기의 간접비 규모가 아닌 성과급 지급시기의 간접비 규모가 기준이 된다는 뜻임

※ 그 해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규모가 다른 연도 간접비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1년도 간접비 수입이 100억이라 성과급 지급이 10억이 가능하게 되었고 11년도의 성과를 평가한 후 12년도 간접비에서 지급하려고 할 때 12년도 간접비 수입은 10억뿐이라 한다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12년도 간접비를 다 써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11년도의 성과를 평가한 후 11년도 간접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면 10억을, 12년도 간접비에서 지급하겠다면 1억을 성과급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 요약정리

- 규정에서는 ‘**성과평가를 하고, 국가사업 간접비의 10% 이내에서 지급할 것만** 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성과급은 연구기관의 회계기간 내 국가사업 간접비규모의 10% 이내
-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
- 단, **과제별로 간접비 수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행정사항

- 추가 질문, 건의 또는 오류 지적 연락처
- R&D도우미 센터 : 02-724-8700, www.rndcall.go.kr

4-2

3책5공(과제수 제한기준) 운영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3책5공 관련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굵은 글씨(bold)는 금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사항

□ 3책5공 기준 적용·운영 방향(안)

- **세부과제 단위**까지 과제수를 산정(협약서에 포함된 세부과제로 한정, 위탁과제는 산정 제외)
- 세부과제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과제에서 **세부과제 책임자도 책임자로서 과제를 1개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총괄과제 책임은 산정 제외)
 - ※ 이 경우 총괄과제는 제32조 제2항 제3호(세부과제의 조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
 -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자로서 1개 수행으로 산정

□ 3책5공 기준 적용 제외 운영 방향

①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연구과제

- (적용원칙)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해당 연구자만 적용, 해당 중소기업은 적용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등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사업화할 목적으로 매칭투자만 한 경우에도 적용

- (금액기준) 1억원이하 과제에 대해 3책5공기준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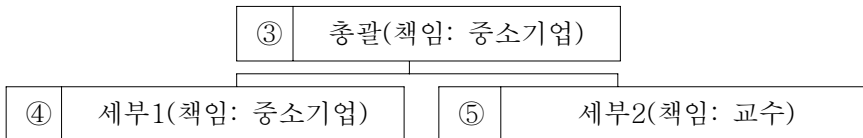
◇ 적용사례 : 음영() 부분(①, ②, ⑨ 과제)의 교수만 적용

※ 단, ⑪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세부과제의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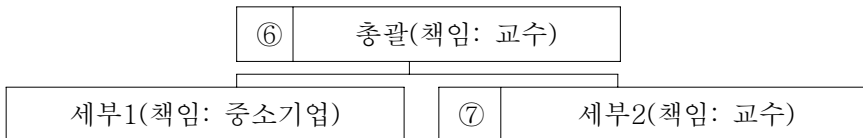
○ (유형1) 단독과제 안에 비영리법인 연구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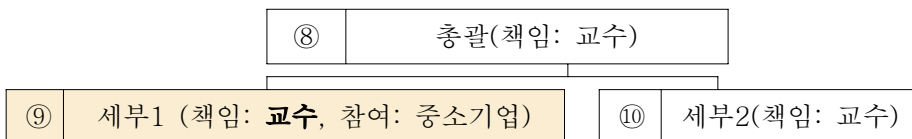
○ (유형2) 총괄책임자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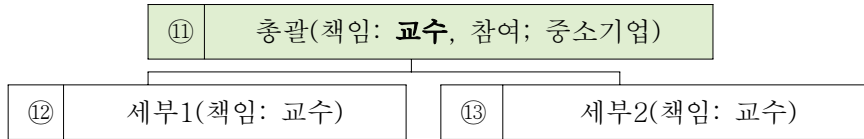
○ (유형3) 총괄책임자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 (유형4) 총괄책임자가 비영리법인, 특정 세부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



- (유형5) 총괄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



② 소액과제

- (적용원칙)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단독과제에 한하여 적용
- (금액기준) 5천만원이하 과제에 대하여 3책5공 기준 적용 제외
- * 다년도 협약과제는 해당연도 연구비를 기준으로 적용

□ 적용시기 및 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시행일(7.1) 이후 새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

4-3

주요 전문기관 현황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개별 법률 등에서 설립근거를 가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 처	전문(전담)기관	홈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www.kictep.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www.kimst.re.kr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www.ipet.re.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www.etri.re.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www.kmipa.or.kr
	(재)기상기술개발원	www.cater.re.kr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원	www.ndmi.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 상기 외 전문(전담)기관은 각 부처 개별 법률을 참고

R&D현장에선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2012년 R&D도우미센터 상담사례-

발행처 및 문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 김나현(02-724-87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제도실 전희성 부연구위원(02-589-5242)
